

시민들 “5·18기념재단 잘 몰라”...역할·위상 재점검 필요



3부-5·18기념재단 30주년

<중> 창설정신 되살려야

올해 5·18기념재단(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지만, 재단의 역할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은 재단이 매너리즘에 빠져 정체성과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 각계각층(5·18유공자, 학생, 일반인, 재단관계자, 지역 법조인, 시민사회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96.4%)에 비해 재단에 대한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재단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역할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민은 27.3%에 그쳤다. 대부분(48.2%) 재단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역할을 알고 있지 못했다. 재단 이름만 알고 있다는 답변도 20%에 달하고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이들은 4.5%나 됐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은 전승 및 기념사업(68.2%)이 가장 높았고 진상규명(66.4%)과 왜곡 및 폄훼 대응(61.8%), 피해자 명예회복(4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1994년 재단 창립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 등 5대 과제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숙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전승사업·왜곡 대응 잘하고 있어 내용 겪는 오월단체 중재 못해 진상조사위 부실 조사 대응 미흡 젊은 세대 체감할 기념사업 절실

재단은 30년간 5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지역민들은 재단이 잘하고 있는 과제로는 전승사업(57.8%)과 왜곡 및 폄훼 대응 사업(37.3%) 순으로 꼽았다.

5·18 교육활동가 양성, 오월교육정책 연구, 5·18 교육콘텐츠 개발과 지원, 오월지기 양성, 청소년·시민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보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못하고 있는 역할로는 ‘5월 공법 3단체(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중재’(40%)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는 재단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오월단체의 내용에 대한 극심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계엄군을 용서하는 내용을 담은 오월단체의 2·19선언으로 촉발한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의 갈등에서 재단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 점이 작용했다.

5대 과제 중 재단의 미흡한 역할은 책임자처벌(38.2%), 진상규명(30.9%), 명예회복(20.9%), 기념사업(20.9%), 배상 및 보상(12.7%) 순으로 집계됐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부족과 관련, 40여년만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진상 조사 초기부터 일부 언론에서 조사의 문제점들이 지적했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은 탓에 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4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주먹밥 조형물 앞에서 옛 전남도청 자리가 어머니회 회원들과 시장 상인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념 사업에서는 5·18행사의 주체가 재단이 되지 못한 점이 거론됐다.

5·18 행사위는 1993년 출범해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재단, 오월단체가 주도적으로 5·18전야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운영해왔다. 재단이 행사를 총괄하는 주체의 역할이 아닌 행사위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어 그동안의 행사가 통일성이 없어 진행됐다는 것이다.

‘재단이 5·18 기념행사를 잘 치르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치르고 있다는 답변이 44.5%로 나타났다지만 ‘행사는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기념행사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37.3%, 18.2%로 집계됐다. 행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민적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못한다’, ‘젊은 세대 감성을 찾을 수 없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재단의 역할로는 ‘행사 개최에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행사위원회를 없애고 재단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재단의 미흡한 역할로 왜곡 및 폄훼 대응이라는 응답이 32.7%나 나온 것이 주목된다. 잘한 점과 미비점으로 동시에 선택됐기 때문이다.

미비점으로 지적된 이유로는 예산과 전문조직이 없어 관행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대응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일부 지역민들은 왜곡을 막기 위해 더욱 홍보에 전념하고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 및 꾸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념재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민들은 “젊은 세대에게 5·18 정신을 알리고 오월정신이 역사책 한 구절로 잊혀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단의 존재 당위성과 역할을 키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기념사업 구성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헌법전문 수록보다 진상조사위 보고서 보완이 더 시급”

5·18기념재단 국민인식조사 63% “허위·가짜뉴스 접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보고서 보완 조치’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학살자 처벌보다 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이같은 ‘2024년도 5·18국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5·18 인지도와 기여도, 이미지 등을 종합한 ‘국민인식지수’는 72.9점으로 전년(73.5점)에 비해 0.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인지도’와 ‘5·18 인식개선 과제’ 항목은 각 0.6점, 0.1점 소폭 상승했으나 ‘5·18 기여도’(5·18이 인권신장·민주화에 대해 기여한 정도), ‘5·18 이미지’(한국 대표 민주주의 역사라는 인식)는 각 1.8점, 1.3점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가 다소 하락했다.

‘5·18기여도’는 5·18이 한국의 민주화·인권신장,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등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며, ‘5·18이미지’는 5·18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의 정의로운 저항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라는 인식을 가리킨다.

5·18 관련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문 제로는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 관련 입법 보완 등 조치’가 21.0%로 가장 높았다.

‘학살책임자 처벌’(18.7%), ‘5·18민주유공자 관련 배·보상’(12.7%),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12.5%) 등 응답도 이어졌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으며, 74.9%는 ‘모르겠다’ 또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진상조사위의 5·18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는 응답이 56.6%, ‘미흡했다’는 응답이 20.9%였다. 또한 최근 1년간 국민 들 중 한 명(63.2%)은 5·18에 대한 허위정보·가짜뉴스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는 ‘1년 간 5회 이상 자주 접했다’고 답했으며, 41.2%는 ‘5회 미만 접했다’고 답했다.

5·18 특별법으로 역사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 답한 비율은 55.3%였으며, 20.9%는 역사왜곡이 여전히거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역사왜곡이 여전히 많을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32.5%),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어서’(21.4%),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서’(17.4%) 등 응답이 나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추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5·18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계엄군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상조사위원회 민병호 전남대 5·18연구소장은 오는 20일 열린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송암동·주남마을’ 사건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면 진상조사위는 조직 구성 이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다만 진상조사위 조사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에서 의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송암동·주남마을 관련 계엄군 9명은 항쟁 연관성 등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집단을 이뤄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고 확인 사실까지 했다 는 점에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민 소장의 주장이다.

송암동 사건은 1980년 5월 21~23일 송암동·효천

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5월 24일 11공수여단이 광주 외곽봉쇄 작전 중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주남마을 사건은 11공수여단이 마이크로버스를 무차별 총격하는 등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건이다. 두 지역에서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진상조사위는 고발의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들고 있다. 이 법은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살인죄 공소시효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행법을 들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